

# 미국 대통령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11월2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부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과 호주 등은 표정관리에도 불구하고 들뜬 분위기를 애써 숨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음은 보고서의 전문을 풀어쓴 것이다. (편집자 주)

##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요약

- 미 대선 투표에서 부시 후보가 재선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정책의 기초는 세금 감면, 기술혁신, 달러 약세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축으로 확대균형 및 자유무역을 통한 경기회복과 재정·무역수지 개선에 주력할것으로 예상
-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부시 행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학·관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전통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할 계획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규제보다는 공정무역에 기초를 둔 대외시장개방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주요 대미 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질것으로 예상
- 부시의 재선으로 미국경제는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해소가 다소 불투명해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1. 경제정책 기초

### 가. 경제정책 기초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듯

산업연구원은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1기 집권 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기존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고용창출법'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감면효과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고, 소비 역시 유가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로 둔화될 경우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부시 행정부는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확대를 도모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수입규제와 대외 시장 개방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나. 통상정책의 기초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부시 행정부는 WTO 도하라운드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등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시장 개방을 위해 다자, 소다자 및 쌍무협상을 상호 지렛대로 활용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수입규제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며, 쌍무협상을 통한 부문별 시장개방보다는 포괄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다. 달러화는 약세 기초를 유지할 전망

부시 행정부는 2005회계연도부터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2010년까지 적자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경한 대테러 정책이 유지되고 사회보장비 지출축소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달러화 약세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예상했다.

부시 행정부의 달러화 약세 기초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해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레이건 행정부 1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국'을 주창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현재 대규모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5년 프라자협상에서 일본 엔화의 인위적인 강세를 유도하였던 미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외환정책을 무역수지적자 개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달러화의 동아시아 주요국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유도하여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 2. 산업·통상정책 방향

### 1) 산업경쟁력 강화

#### 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성장 모색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학·관 협력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달러화 약세정책은 미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산업구조는 IT산업을 중심으로 개편

구 분		주 요 내 용	영 향
재 정 정 책	기본 방침	감세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세 유지	· 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대미 수출 환경 개선
	주요 내용	· 한 법인세를 1년간 3.5%에서 5.25%로 인하 적용 · 감세정책의 항구화 · 2010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축소 -국가안보 외 정부지출 억제	
경 쟁 력 강 화 정 책	기본 방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전통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 재정적자 축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달러화 약세로 수출채산성 악화 우려 ·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과 달러 화 약세정책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원 가 부담 가중
	주요 내용	· 전통제조업과 대기업의 역할 중시 -기술혁신과 비용절감 등 지원 · 근로자 교육훈련과 고등교육 강화 · 아웃소싱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규제완화 등을 통한 新기업환경 조성 · 교토협약 비준 거부	
통 상 정 책	기본 방침	자유무역 확산이 미 국익에 유리	· 감세정책 영구화 등 경기부양책 운용으로 대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증 가율은 둔화될 예상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시 대미주 수출 여건 악화 -한·미 FTA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교 역자유화
	주요 내용	· WTO 도하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산업을 보호 -세이프가드 발동 등	

되었으며, IT산업의 중심인 전기전자산업의 GDP 점유비중은 1987년 이후 세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산업을 포함한 IT산업은 전문 분업생산시스템, 즉 연구개발 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과 관련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재산업인 화학산업은 미국의 석유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나노기술(NT)의 개발과 연료전지 등 환경기술

(ET)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및 철강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철강산업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통해 보호를 받은 바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하이브리드 및 연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1대당 4,000달러의 세금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경 자동차 연료로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축소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서 10만 명의 근로자를 교육훈련 시키는 프로그램에 2억 5,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2) 자유무역 추구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보호주적 통상입법의 제정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은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가. 수입규제보다는 대외시장 개방에 치중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통상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자유무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WTO 도하라운드와 주요 교역국들과의 쌍무적 또는 소다자적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자유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 나. 자국산업 보호위한 한시적 수입규제 조치 활용

부시 행정부는 철강·섬유·의류·지류 수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산업 및 무역상황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 수출 증대 등 미국기업의 대중 진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EU 및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신중히 추진하고, 미국기업의 세계화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기업의 해외조달(offshore sourcing)을 장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1월에 철폐되는 섬유수입 쿼터제로 인해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의 수입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규제를 모색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집권 초기에 미·중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 한·미 통상현안

구 분	현 안
농 산 물	쌀소비시장 개방, 의무수입물량(4%) 확대,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
지적재산권	DVD 불법복제, 의약특허 등 단속강화, 한국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자 동 차	수입자동차의 안전, 환경표준인증, 관세 인하
통 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설정
식 품	기능성 건강식품 라벨링 강화(전세계 대상)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



##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전망

구 분	현 안
철 강	· 現 수입규제 소강상태 당분간 지속 -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재규제가 예상되나,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에서의 비용상승에 따른 반발로 신중히 추진할 예상
의류 섬유	· 쿼터폐지로 인해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향후 2년간 중국산이 미국시장의 70% 점유 예상 · 고유가 지속으로 원가부담 가중 · 대중 수입급증 혹은 대중 수입규제에 따른 미-중 통상마찰의 반사이익은 적을 전망
자동차	· 자동차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 강화 · 자동차관세 인하 요구 · 미래형자동차 개발 경쟁 심화
IT	· IT 경기 조정국면 지속
바이오	· 줄기세포연구 연방정부지원 금지
인쇄용지	· 수출자율규제 지속
해외건설	·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수주 증가

### 다. 대한 통상정책은 현안타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점

부시 행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거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협상의 예외분야를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미간에는 새로운 통상현안보다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조정중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자동차관세의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보다는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 3.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가. 양국간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해 왔으나, 수입규제 건수는 연평균 2건에 그쳐 한·미간에는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전면 검토하여 통상마찰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대미수출은 400억달러, 대미 수입은 280억달러로 각각 예상되어 무역수지흑자가 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의 통상 및 기술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점유율의 안정적인 유지와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차세대기술의 개발과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 통상 및 기술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여 양국 기업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제3국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국과 미국간의 통상증진이나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미 수출이나 수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내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안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할 경우 이해 당사국과 공동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서비스시장과 농산물시장의 피해 가능성과 일부 첨단업종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 단순히 교역 통계에 의존한 분석보다는 미국산업에 대한 미시적인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에 입각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GDP규모는 11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수출규모는 7,000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미국에는 다수의 일본기업과 유럽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이들 기업의 현지조달 비율이 평균 70%로 매우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달러화 약세 정책 하에서 원화절상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채산성과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기업들은 결제통화를 달러화 일변도에서 유로화 및 엔화 등으로 다변화하여 달러화 약세 장기화에 따른 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다.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

미국과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우리의 주요 수출경쟁국들이 수출선을 미국시장에서 여타 수출시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일본기업과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